

논문

## 현장에서 본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오치규(오선생 교육 컨설팅 대표)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교육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없이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정책수단의 선택으로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표방하는 바와는 반대로 오히려 교육에서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에서의 여러 개혁들이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첫째, 등급제·모의고사금지·추첨에 의한 선발·입학사정관제 등 경쟁을 은폐시키려는 정책들 때문이다. 둘째, 입시제도나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잦은 개편이 또한 사교육이 급증하도록 했다. 셋째,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문제와 문제의 형식, 그리고 과목 축소에 따른 어려운 문제들이 사교육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런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교육을 공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재의 여러 교육개혁안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교육현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육개혁안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교육정책, 입시제도, 공교육, 사교육, 교육현장

---

\* 여기에서 말하는 '현장'이란 교육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교육 현장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교육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점들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 입시 정책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 I. 시작하며: 기본 개념과 방향이 없는 헛발질 교육정책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마저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최근 대통령들의 취임사와 정책 방향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교육 정책에 관한 한 얼마나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이 없는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김대중 정부는 우선 공교육 개혁에 집중했다. 학교마다 ‘존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걸게 하고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 체벌을 금지했다.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전형형을 도입하고 심지어 무시험 전형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능력위주의 사회’에서의 ‘능력’이란 ‘학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시되었고 ‘신지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98년 1.66%에서 김대중 대통령 말기인 2002년 1.96%로 증가했다. 그리고 입시 계열 학원 수는 13,727개에서 19,857개로 증가했다.<sup>1)</sup>

‘다양한 전형’, ‘무시험 전형’ 등에 대한 기대로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실패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이해찬 세대’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학습이 있으면 반드시 평가가 따르게 되어 있고,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다양한 전형’, ‘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발표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혼란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리고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임사의 교육 정책과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특성화 교육’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모순된 것이다. 교육 정책의 개념과 기본 방향에 대한 정립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욕만 앞선 ‘헛발질’ 교육 정책을 김대중 정부는 잘 보여 주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이 혼란된 헛발질 교육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도 이어져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교적 짧게 교육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취임사에는 단순히 ‘교육도 혁신되어야’ 한다는 언급만 존재한다. 무

1) 교육과학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국민일보』 2009년 2월 3일자에서 인용.

엇이 문제이고 지금 교육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단순히 ‘아이들이 입시지옥’에 빠져 있다고 규정하고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언급만 존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수월성보다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대폐지론’, ‘국립대 공동학위제’, ‘자사고 확대안 백지화’ 등의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등급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5년간 사교육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보다 2배가 늘어 연평균 21조에 달하게 되었고 조기 유학의 경우에 1999년 1,839명의 15배가 되어 2006년의 경우 2만9,511명으로 늘어났다.<sup>2)</sup> 이른 바 ‘기러기 아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 2005년의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2.79%로서 좌파 성향 정부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증대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2003년 0.292 수준이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08년 0.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 사회 전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도 같은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교육 문제에 관한 한 ‘헛발질’이 계속 이어졌다. 좌파 성향의 정부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하고 교육에서마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잘못된 정책 수단 때문에 나타난 정책 실패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나타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전의 정부와는 조금 다

2) 교육과학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연도별 조기유학 현황(2008).

른 진단을 내 놓았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취임사의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획일적 관치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획일적 관치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 1월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교육부의 폐지를 시사했다. 그리고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과 자율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존속되었고 ‘자율’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억압과 공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학원의 야간 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하고 전국 457개의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연간 1억 3천만 원씩 총 60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3)</sup>

학원의 야간 교습 시간 제한 정책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정책은 그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던 영역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들어가는 일종의

3) 『조선일보』, 2009년 7월 9일자.

‘개입주의’ 정책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취했던 ‘자율’, ‘개방’ 등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다.

이처럼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에서 이미 혼선을 거듭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부터 혼란스럽다면 적절한 방향의 좋은 정책이 나오기가 힘이 든다. 비유컨대 우리의 교육 문제는 오래된 ‘고질병’과도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치료하겠다고 매달려 봤지만 그럴 때마다 병은 더욱 덧나고 고통을 커져만 왔고 우리는 ‘돌팔이 의사’에게 속았다는 생각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에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대통령들이 그런 ‘돌팔이 의사들’의 정점에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09년 4월 교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교과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믿는다”는 말을 하며 교과부 장관을 질타했다.<sup>4)</sup> 대통령 딸의 이런 심정은 교육 개혁에 대해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오래된 병을 치료하겠다는 ‘돌팔이 의사들’에게 속을 대로 속아 이제는 의사들을 믿지 않게 된 고통스러운 환자의 회의와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사교육을 잡을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커녕 ‘사교육을 잡는다’는 그 말 자체의 진정성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아지기는커녕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더 근원적이고 복잡한 어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점검해 나가는 태도가

4) 『경향신문』, 2009년 6월 24일자.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질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더불어 살며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개혁가들은 그 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서히 조심스럽게 치료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을 사랑하고 다녀라’는 세간의 상식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항상 나타난 것은 ‘돌팔이 의사들’뿐이었다. 최근에도 우리는 이런 ‘돌팔이 의사들’이 마구 사람을 잡는 일을 생생히 목도했다.

## II. 최근 교육 개혁을 둘러싼 소동: ‘사교육과의 전쟁’ 소동

2009년 4월 24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박승준 위원장은 “사교육 비 개혁 정책의 하나로 학원의 오후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며 이른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sup>5)</sup> 사람들은 그때 처음 ‘미래기획위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미래기획위원회가 교육 문제까지 좌지우지 하고 위원장의 힘이 교과부 장관을 넘어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어 학원에 대해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으로 도움을 받아 학원 심야수업금지에 대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의 기준이 10시라는 것도 그가 이미 정해 놓은 것이었다.

이어 그는 불법교습 신고 포상제(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가 빅3’를 대상으로 대대

5) 『국민일보』, 2009년 4월 24일자.

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외교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신 가중치 폐지를 천명하고 ‘사교육과의 처절한 전쟁’에 대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며칠 새 많은 논쟁이 일자 그는 “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뒤 “교과부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2~3주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up>6)</sup>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사교육을 잡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그간 밝혀진 바는 전혀 없었다. 어떤 공청회도 없었고 프로젝트 발주도 없었고 당정회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정교하게 준비했다’는 말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7일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과연 MB 철학, 정부 철학에 맞느냐”고 급제동을 걸었고,<sup>7)</sup>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금 교과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학원규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장관은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앞으로 (곽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일침을 놓았다.<sup>8)</sup> 그리고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마저 2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자문기관의 장에 불과한 사람이 언론에 나타나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6) 『동아일보』, 2009년 4월 27일자.

7) 『한국일보』, 2009년 4월 27일자.

8) 『한국일보』, 2009년 4월 28일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예기해 혼선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곽승준 위원장은 “자기 분수를 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sup>9)</sup> 그리고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설마 대통령이 10시까지만 학원을 하라고 했겠느냐”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29일 수석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 나서지 말라”고 지시를 하자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고 곽위원장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장렬히 전사’한 듯 했다.<sup>10)</sup>

5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원 심야교습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두언의원은 MBC 아침 방송에 나와 “학원이 많은 데서는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을 개인 사정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런 결정을 한 동료 임태희 의원에 대해 음해성에 가까운 발언까지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친이계의 핵심이라고 할 의원들 사이에서 감정 다툼을 넘어서 모종의 권력 다툼으로까지 해석되기도 했다.<sup>11)</sup>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학원심야 교습 등 사교육에 대한 논쟁은 6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교과부 장관을 질타하고 고강도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믿는다”, “학원이 세기는 센 모양”이라고 원색적인 언급을 하며 “사교육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점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며 “서울대 등 국립대도 성장 위주의 선발보다는 현행보다 지역과 계층별 할당을 더욱 높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

---

9) 『국민일보』, 2009년 4월 28일자.  
 10) 『조선일보』, 2009년 4월 29일자.  
 11) 『헤럴드경제』, 2009년 5월 21일자.

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계층과 지역을 배려한 대입 전형 확대를 주문한다.<sup>12)</sup>

바로 그 당일부터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10시 이후 학원 수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했다. 7월 6일에는 교육개혁가로 자처하며 인수위부터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이주호 교과부 제 1 차관이 직접 학원 단속 현장에 나타나 진두지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관내 학교는 148개인데 학원이 5천556개라고 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본다”고 안타까워했고 강남교육장에게 “국민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보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민들 허리가 더는 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 교습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sup>13)</sup>

학원의 수업시간은 시도 조례로 제한되어 있다. 서울은 10시, 경기도는 11시, 인천은 12시 등 각 지역마다 수업시간의 제한은 다르다. 보통 10시 이후에는 수업이 없는데, 9시나 10시까지 야간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주로 하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시간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질문을 하느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 10시 이후까지 보충 수업을 받는 학생들, 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등 학원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은 사실상 10시 이후의 수업을 묵인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이라 할 영어유치원, 초중학생 특목고 대비 대형학원들은 사실상 10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로 고등학생

12) 『동아일보』, 2009년 6월 25일자.

13) 『연합뉴스』, 2009년 7월 7일.

을 대상으로 하는 군소 학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목동이나 강남 등 학생과 학부모의 발언권이 센 지역에서는 야간 자습을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10시 규제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단속이 시작된 날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기여서 학생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10시에 수업을 마치더라도 시험기간에는 12시 정도까지 공부를 시킨다.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학원에서 집으로 가자니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다시 돈을 내고 독서실로 가야 할 상황이고 늦게까지 남아서 질문을 하는 등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험기간에 이런 단속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어떤 학생이, 어떤 학부모가 이런 상황을 좋아할 것인가? 자정이 되도록 학생들을 남겨 두고 공부를 시킨다고 학원이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 모든 학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면이 있고, 학생들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학원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힘든 시험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 학원장들과 강사들은 편해진 면도 있었다. 이주호 차관이 만약 학원에 들어왔더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짜늘한 눈초리’만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만났더라면 이런 정책이 과연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쯤을 생각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곽승준 위원장, 이주호 차관, 정두언 의원 등에 의해 주도된 ‘사교육과의 전쟁’ 당사자들이 제시한 교육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6월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



  
여의도연구소  
정책 토론회

**사교육**

#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0: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여의도연구소  
개회사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축 사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최구식

사회 : 국회의원 정두언  
발제 :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안선희  
토론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강운봉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김선희  
교육평론가 이 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최 진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문의 : 여의도연구소 (02-2070-3300)

게 이길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였다.

이 토론회를 알리는 아래의 포스터는 ‘사교육’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들은 사교육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이 팽배해 그것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또 성급하게 사교육의 팽배의 원인을 ‘사교육’ 자체에 돌리고 그것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을 벼랑 끝으로 몰아 죽이겠다는 의미 혹은 ‘사교육’이 청소년들과 중산층, 서민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화의 섬뜩한 한 장면을 그린 포스터는 사회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야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안선희가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책	주요내용	문제점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외고 입시에 외국어/국어(사회)만 내신 반영 과학고 입시에 수학/과학만 내신 반영 자율형 사립고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 (학생부 심사 및 지원자격 제한 등 금지)	특정 과목 부담 증가 수월성의 문제
대입전형	고1 성적 내신 반영 배제 수시는 내신 및 논술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내신9등급제를 5등급제 절대평가로 개선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 반영비율 축소	내신 반영 배제하면 고2 선행학습 및 수능 학원 등장 등급 간 격차 확대 로 문제점 발생 특정 소수 과목 부담 증가

학원규제	전국의 학원 운영시간을 9시나 10시로 규제 (초등생은 9시)	야간 자습 후 추가 보충 필요한 학생들은 과외를 해야 함
교원평가제도 제도화	인센티브제공 확대, 연수 학습 기회 제공 부정적교원 대책 내실화	인센티브제는 학교의 학원화 초래 가능
방과후 학교영어 무상교육실시	초중생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 단계별 실시	교육 재정 증가의 문제
EBS 학습지원 확충	초중생을 위한 별도 사이트 구축 학교 베스트 현장 강의 제공	EBS의 본질적 문제점 도외시(온라인강의의 한계, 기존 다른 온라인 강의와 경쟁 문제)

이 주장들은 기존에 나왔거나 시행해 본 제도들로 언뜻 살펴보다라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깊은 연구나 논의 없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개인의 사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교육 담당자들은 아마 이 주장들을 보고 빙긋이 웃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장들이 침체된 학원을 다시 살려 줄 고마운 주장들이기 때문이다.

외고 입시에서 영어와 국어의 내신만 반영하고, 과학고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만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가?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 그들이 그럼 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 없이 그 과목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것 같은가? 아마 학원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기초 내용과 더불어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을 시킬 것이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학원들을 편안하게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킬 것이고 학교의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내신 등급을 완화하면 오히려 등급 간 격차가 커져서 상위권 학생들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자칫 한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

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평가가 문제가 있어 상대평가로 돌아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내신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절대 평가로 돌아선다면 내신은 아마 입시에서 무의미하게 배제되고 말 것이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유치원, 미술 음악 체육 등 예능 교육, 어학 연수비, 과외, 방문 학습지, 온라인 교육 등 수많은 사교육은 시장 경제에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자들이다. 우선적인 것은 이러한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토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분석은 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교육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을 억압하고 제안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분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교과부의 8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7월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월 평균 자진신고는 학원 41%(305건), 교습소 123%(678건)가 증가했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무려 5329%(5595건)나 폭증했다’고 한다.<sup>14)</sup> 이를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학과라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하지만 개인과외 교습자가 5595건으로 폭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는 이미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발 빠른 강사들과 원장들은 이미 강남 일대에 개인 과외방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학원에서 10시까지만 공부할 수 있다면, 10시 이후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면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개인 과외방이 난립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분명한 일이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14) 『투데이코리아』, 2009년 8월 13일자.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돌팔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知彼知己 百戰不戩’라는 고답적인 문구를 여기에서 말해야 하는 것일까?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면 사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단속 현장에는 나타났지만, 학원 현장에 나타나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지 알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처절한 노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한 이런 전쟁을 ‘百戰百敗’하고 말 것이다. 이미 2009년의 ‘사교육과의 전쟁’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교육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 밤이 늦도록 그렇게 학원은 붐비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하고 그런 열정을 어떻게 학교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주호 차관은 석사 이상 30·40대의 정책보좌관들을 채용했으며 인턴비서도 영국 명문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출신으로 채용해 막강한 리서치팀을 구성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sup>15)</sup> 인수위에서 이주호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와 방과 후 학교에만 의존하는 현재 영어 공교육 체제로는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인수위가 내린 결론”이라며 “2010년부터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교과서, 교과과정, 교원 인사제도 등 영어와 관련된 모든 교육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어는 영어로 가르치기(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즉

15) 『매일경제신문』, 2004년 5월 27일자.



‘영어몰입식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사교육 기업들의 주가 폭등과, 영어유치원 열풍을 일으켰다. 심지어 운전기사의 자리까지 교육전문가로 충원했다는 전문가들의 작품이 이런 식이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교육 현장으로 나가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강사 등 당사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수위는 ‘인수’하는 기구이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육 문제를 ‘인수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이든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성과주의와 오렌지를 ‘아퀼라’라고 적으면 영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의 무분별한 태도가 함께 어울려 또다시 교육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야 말았다.

### Ⅲ. ‘헛발질’ 교육개혁의 원인들

학원 시간 규제에 대한 이런 소동에 대해 2009년 7월 7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외 단속한다고 난리인데, 과외를 어떻게 다 단속하겠는가? 공부안하는 학생들을 단속해야지 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단속하려는가.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던 전두환 대통령 때도 못했던 일을 촛불도 못 끄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단속하겠는가?”라고 하며,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소위 헛발질이라고 한다.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다보면 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꾸 실패하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그간의 ‘헛발질’ 교육 정책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다. 성급하고 설익은 정책들이 ‘헛발질’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적절한 지적이지만, 그 ‘헛발질’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분

위기가 조성되어 결국은 ‘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역시 적절한 지적인 것 같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 하며 그 정책의 적실성도 진정성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헛발질’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잦은 제도의 개혁, 학생들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시험 제도,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교육의 현실 등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 1. ‘회칠한 무덤’ - 경쟁 은폐 정책

오래되고 만지만 만질수록 덧나는 상처는 분명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 개혁가들은 그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상처를 덮기만 하고 상처에 좋은 분을 칠하기만 하면 상처가 없어질 것으로 오해하고 단기적인 처방을 마구 내린다. 그것은 마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은 회를 칠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의 부패가 없는 깨끗한 무덤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sup>16)</sup>

경쟁은 분명 존재한다. 좋은 대학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다. 그리고 그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려는 욕망과 경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이런 전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경쟁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면, 일단 그 경쟁을 인정하고, 그 경쟁이 공정한 것이 되도록 하고,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그 경쟁의 사다리를 하나씩 오를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경쟁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노

16) 마태복음 23: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력해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찬 장관이 98년 발표한 대학입시 개선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능, 본고사 중심의 대학입시선발과정에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을 도입하고 내신제 대신 선택전형자료(수능, 논술, 내신, 실기)를 중심으로 각 대학마다 입시전형을 자율화 다양화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내신 제도를 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하고 전형자료의 활용 방법을 학과에 맞게 다양화해서 공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며 자율학습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등을 폐지하고 사설모의고사를 폐지해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했다.<sup>17)</sup>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강조해 고등학교 댄스그룹이 ‘신지식 고등학생’으로 선정되어 표창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논술,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에 필요한 여러 활동들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지만 오히려 학교에서는 공부시간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했고, 촌지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정년을 단축하고, 체벌을 금지해 체벌 교사에 대한 경찰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등의 일들로 교권이 추락하자 사교육, 학원에 대한 의존이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경쟁은 은폐하기 위해 경쟁의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쟁의 방식으로 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더 증가시킨 것에 지나

---

17) 사설모의고사 금지는 최근 또다시 부활되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10월 6일 ‘일선 교교의 교내 사설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했다. 그는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본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가 평일 수업을 빼먹고 교사에게 감독을 시키면서 사교육 업체의 시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이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이미 2개월 전에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0년 10월 6일자.

지 않는다.

일선 고등학교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외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제한해 버린 것이다. 실력에 대한 평가가 절박한 고3의 경우 그 이전에는 사설 학원에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매월 1회 내지 2회씩 보고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평가해 왔다. 고1, 2의 경우에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성적의 평가를 해 왔는데 이럴 경우 시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낮은 성적의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험을 못 보도록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적에 대해 둔감해지기 시작했다. 학교 시험은 단기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적이 낮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수능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자위하며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실상 수능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고3이 되어 모의고사를 몇 번 치를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계속 받으며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고3까지 유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들이 고3이 되어 첫 모의고사를 보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미친 듯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간다. 5월이나 모의수능을 보는 6월이 되면 학원에는 고 3 학생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과외 수업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게 된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경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경쟁에서 학생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2009년 ‘사교육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태도도 이와 유사하다. 그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은 아예 배제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 같은가? 오히려 학원들은 2학년 3학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칠 것이고 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더 즐거운 학원 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다. 등급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그럼 공정한 경쟁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등급선에 걸려 등급이 낮아질까 더 전전공공하게 되고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등수’가 아닌 ‘등급제’가, 등급이 완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사교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2008년 수능부터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었다. 원점수와 심지어 표준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단지 등급만을 공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였다.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공개하던 이전과 다르게 등급만을 공개하는 제도였다. 상위 4%까지는 1등급, 그 이후 7%까지는 2등급, 이후 12%까지는 3등급, 이후 17%까지는 4등급, 이후 20% 17% 12% 7% 4% 순으로 9등급까지 정하고 그 등급만을 발표하는 제도였다. 수험생을 대략 50만 명으로 잡으면 상위 4%인 약 2만 명 이상은 1등급을 받고 다음 약 3만 5천 명 정도는 같은 2등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등급제의 실시 취지는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어영역에서 대체로 원점수 추정치로 95점 정도, 외국어 영역에서는 대략 92점 정도, 수리영역에서는 87점 정도의 점수로 1등급과 2등

급이 갈리게 되자 사교육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더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한 문제 더 틀려 95점이 92점이 되어 그 점수가 그대로 대학 진학에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등급으로 전환되어 반영될 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5점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커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영향력은 상당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두 문제로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지어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한 두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비교적 쉽게 나오는 외국어 영역(영어)에서 학원 강사들은 최상위 외국어고 학생들을 상대로 그룹 지도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어쩌다가 실수로 한 두 문제 틀리는 학생들이었지만 혹시 추가적인 실수가 있을까 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등급제가 오히려 불안만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평등주의적 정책은 주로 수월성보다는 평등주의를 강조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나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폐지론’, ‘국립대 공동학위제’, ‘자사고 확대안 백지화’ 등의 논의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다. ‘혁신위’의 최초 수능등급제는 2등급제였다고 한다. 결국 수능 1등급 기준으로 7%안과 4%안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심지어 안병영 교육 부총리가 7%안이 관철될 경우 사직을 결심하고 사표까지 미리 제출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는 “변별력을 위해선 최소한 9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반대했고 사석에서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sup>18)</sup>

18) 『중앙일보』, 2007년 11월 27일자.

이러한 획일적 평등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서울의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 경기도의 청심국제중학교, 부산국제중학교의 선발 인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된다. 그중 서울의 영훈중과 대원중은 서류로 3배수를 뽑은 다음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내신이 반영되고 자기소개서가 포함되므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더라도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더 증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권고에 따라 각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에 따른 단순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이 실시하는 전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전형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대학별 독자 기준에 의한 전형, 특성화 고교전형, 취업자 전형, 산업대학 우선선발 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등. 그 전형 방법도 대학마다 다 달라서 학생부, 수능, 논술, 구술, 대학별 고사, 실기 고사, 특기자 자격증, 입상증명, 교사추천, 학업계획서 등 지원하려는 전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도 너무나 다양하다.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위해 또 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3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학생의 인내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해 둔 다양한 전형 방법이 오히려 더욱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대통령이 좋아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 위해 60개교에 350억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4월 14일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수

를 한꺼번에 많이 해서 도입하는 학교는 환영하지 않으며 전체 학생의 10% 이상을 확보해 요란하게 해박야 소용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산안 배정에 각 대학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내신 성적이 포함되고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면접 자체를 연습해야 하는 등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미 입학사정관 학원들이 생겼고 온라인 업체들도 입학사정관 강좌를 개설해 두고 있다. 너무 준비 과정이 막막해 ‘사정관(査定官)’이 아니라 ‘사정관(死定官)’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내신, 수능, 수시 대비 논술 면접에 또 하나 입학사정관 입시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경쟁을 은폐하거나 완화시키려는 여러 정책들은 오히려 더욱 큰 혼란을 가져 오고 사교육비의 증대에 이바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목고를 증대시켜 특목고에 대한 사교육을 감소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00여명의 서울 시내 외고에 가려고 수만 명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외고나 특목고의 숫자를 더욱 증대시키면 지금처럼 상위권 학생들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특목고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특목고에 가면 칭찬 받는 상황에서 특목고에 못가면 ‘둔재’ 취급 받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 어떤 부모가 준비를 시키지 않을 것인가? 평준화의 틀 속에서 기형적인 형태로 명문고가 된 특목고들이 존재하는 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 2. '마루타' - 잦은 제도의 개혁



교육 관련 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해 본 사람이라면, 교육업의 진정한 후원자는 교육부 혹은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 때마다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교과과정, 새로운 입시 제도를 들고 나와 실험을 한다. 그 실험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은 곧바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사교육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힘든 일이다. 새로운 집이 완성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절박하게 새로운 집을 지을 만큼 현집이 낡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이 살던 집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던 집을 허물 때에는 조심스러운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신중함이 교육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집을 허물어 버린다. 새롭게 지은 집에서도 불편한 점이 나타나면 또 허물어 버린다. 새로운 집은 사실 예전에도 살아봤던 집이고 예전의 집과 별반 차이도 없는 집이다. 방, 거실, 화장실의 위치만 바꿔 놓고 새집이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그 집들은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본 사람들이 만든 집이 아니다. 아니 하루라도 같이 살아보고 그 집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사람들과 ‘공유된 유대’(shared bond)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집이 아니다.<sup>19)</sup> 어디에서 햇볕이 드는지, 어느 쪽으로 출입문을 만드는 것이 편한지, 어디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지,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이고 어떤 동선으로 주로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 고려해서 만든 집이 아니다. 그 집들은 대부분 전문설계사들의 머리에서 나온 집들이다. 그들은 좋은 도면으로 깨끗하게 만든 집에 모든 사람들이 잘 적응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는 그 집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집이 더 우선적이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잘 적응하기만 하면 된다.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새집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계단은 또 어느 쪽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화장실과 계단을 찾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교육 과정의 개편도 이런 식이다. 6차교육과정(92년-97년) 당시 고등학교 수학은 공통수학, 수학1, 수학2로 나뉘어져 있었다. 문과는 공통수학과 수학1을 공부하고 이과는 수학2를 추가로 공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98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10-가, 10-나, 수학1, 수학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수학이 세분화가 되었다. 문

---

19) Fred Dallmayr, *In Search of the Good Life: A Pedagogy for Troubled Times*(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7), 3.

과는 10-가와 나, 수학1까지 공부하고 이과는 수학2를 공부하고 미분적분, 확률통계, 이산수학 세 과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수능을 보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은 문과에서 미분적분이 빠지고 이과에서 일차변환이 빠진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수학에서 단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해 중1, 중2, 중3, 고1 하던 것을 7-가/나, 8-가/나, 9-가/나, 10-가/나라고 수학의 제목을 바꾸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수학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학원을 미리 찾게 되었다. 형 누나들이 배우던 수학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형들이 쓰던 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숫자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수학의 제목이 정해지자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가 더욱 더 증대하게 되었고 초등학생들이 8, 9를 공부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교과목의 명칭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명칭만 바뀌더라도 모든 것들이 바뀐 것으로 생각되고 순서만 흔들어 놓더라도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의 변화만을 주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만 공지하더라도 엄청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는 일반사회가 앞쪽에 있었고 지리가 뒤쪽에 있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리가 앞으로 나오고 일반사회가 뒤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자 이전의 책과는 전혀 다른 책으로 생각되어 사회에 대한 참고서를 모든 학생들이 다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부와 출판업

자들이 짜고 하는 일이라는 농담을 강사들이 하곤 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형들이 쓰던 ‘수학의 정석’을 버리고 다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니 말이다. 2009년부터 또다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10-가/나에서 고등수학 상/하로 바뀌고 고등학교 2학년은 수학1,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로 바뀌게 된다. 수학 1에서 나오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부분이 앞으로 나왔을 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또다시 학생들은 수학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 인식해 모든 교재를 다시 구입하고 또다시 학원을 찾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그 많은 수학 관련 사이트들은 또 당분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의 일이 되풀이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 역시 이런 식의 마구잡이 변화를 겪어 왔다. 2007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대학 입시 제도를 변경하려면 적어도 6년의 유예기간을 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거의 3년 예고 기간을 두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자는 말이지만 사실상 개별 대학들의 입시제도 변경까지 고려하면 그 변화는 참으로 변화무쌍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더 복잡해진다.

대입제도 변천사 요약			
개정의 의도	내용	문제점	
1945 1953	대학별 입학시험	부정입학 문제	
1954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연합고사 + 대학별 본고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1955 1961	실패한 연합고사의 시정 / 대학자율 대학별 본고사 + 내신(관장)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19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성적우수자 탈락 / 비인 기대학 등 정원미달	
1963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자율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1964 1968	실패한 국가고사의 시정 /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1969 1972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 험) + 대학별 본고사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1973 1980	자격시험의 부작용 시정 /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조) + 본고사 + 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1981	과열과외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 + 내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1982 1985	예비고사 개선(선발 의 타당도 제고) 무의미한 합격선 폐지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입시혼란 적성무시 지원
1986 1987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 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 및 미달, 논술 미흡
1988 1993	선시험의 부작용 시 정/논술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 + 내신 + 면접	대학의 선발기능 미흡, 면접의 기능 미흡
1994 1996	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1997 200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사교육 과열
2002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 추천서 + 심층면접 등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사교육 과열
2007		수능등급제 첫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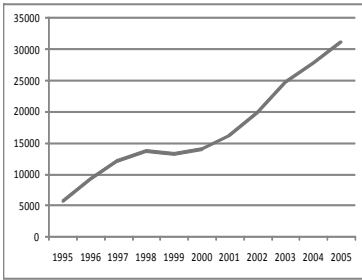
연합뉴스그래픽

대학별 입학시험(53-54)으로 부정입학의 문제가 나타나자, 대입연합고사와 본고사를 실시(54-61)하다가 결국 대입자격국가고사로 바뀌었다(62-63). 성적 우수자가 탈락하고 비인가 대학의 정원이 미달하자 64년 다시 대학별 고사가 부활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류대 문제가 나타나자 또다시 69년부터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었다. 본고사 실시로 과열 과외가 문제되자 73년부터 예비고사 본고사에 내신이 포함이 된다. 81년부터는 과감하게 본고사를 폐지해 버리고 예비고사와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82년에는 예비고사의 합격선을 폐지한 학력고사가 등장해 내신과 같이 대입에서 사용되었고 86년에는 학력고사 내신과 더불어 대학의 선발기능을 고려해 논술이 다시 포함되었다. 88년에는 학력고사의 극심한 눈치작전을 막고자 선지원 후 학력고사를 보고 내신과 논술이 포함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94년에서 96년까지는 수능이 새롭게 도입되고 대학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내신과 더불어 본고사가 부활한다. 또 과열 과외가 문제되자 본고사가 폐지되고 97년부터는 수능과 논술 그리고 새롭게 학생부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2002년부터는 수능과 논술 및 추천서 전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심층면접이 새롭게 등장한다. 2008년에는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었다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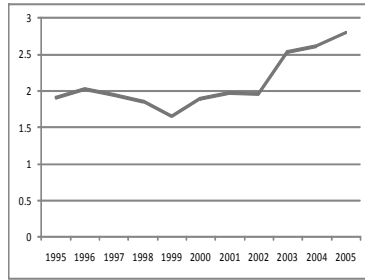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략 그 변동을 적은 것인데, 실제로 시험의 횟수, 방식, 시험에 포함되고 빠진 과목들, 문제의 숫자, 점수 산정 방식 등이 바뀐 것까지 고려하면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형 방식까지 여기에 덧붙이면 사실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전체적인 입시제도에 대해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진학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별 학생들의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의 산출 방식이 대학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담임선생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정해서

점수를 산출해 오라고 말하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원이나 사설 온라인 입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이 증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본격적으로 입시전형을 다양화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오히려 입시 학원의 수와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대했다는 것을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입시 학원 수



GDP대비 사교육비 비중(자료-교육과정평가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09년 4월 27일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학원이 없는 시절에는 본고사가 의미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학원이 (본고사를 위해) 다 달라붙게” 되어,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은 완전히 망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sup>20)</sup>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본고사를 대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러므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에서도 논술이나 입학사정관제도, 뒤에 이야기할 수능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똑같

20) 『연합뉴스』, 2009년 4월 27일자.

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제나 논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논술과 면접을 시행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학교 내신을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신은 내신대로 논술은 논술대로 수능은 또 수능대로 학교의 수업과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후세대에게 학습시키고 그 학습을 성실하게 완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이 입시 제도라면 왜 이런 균열이 생기도록 입시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능으로 하든, 본고사를 보든, 논술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입시를 진행하더라도 교육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제도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행착오를 통해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자연스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학력고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수능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한다. 학력고사가 잘 정착한 시점에 수능이 도입되었고, 수능이 잘 정착한 시점에 또다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수능에 대한 문제 유형이 이제 거의 파악이 되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수능 준비 자료들을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또다시 수능 이외에 논술과 면접이 강조되고 듣도 보도 못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날 것이다. 그럼 또 어떤 제도로 바꿀 것인가?



60년대 초반 고려대 총장이었던 김상협 씨가 문교부 장관 재임 시에 교육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거의 펴지 않았다. 이를 본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장관은 왜 일을 하지 않소?” 라며 꾸짖자, “교육은 국가 백년대 계이기 때문에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새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다”하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sup>21)</sup> 문제가 있을 때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오랜 기간의 준비와 단계적인 시행 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급하게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해 마구 바꾸어 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이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떤 혼란을 겪을지 우리는 그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 3. ‘나 잡아 봐라!’ - 어려운 시험 문제

학력고사는 객관식 단답형이 주를 이루어 ‘정확하고 빈틈없는 정리’가 곧 점수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문학의 해석에서 마저 정확한 객관식 정답의 길을 제시했던 서한샘 선생과 같은 스타 강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횡행했던 시대였지만 공부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점이었다. 시험은 주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나왔고 교과서를 철저히 파고들어 학습하고 암기할 만큼 점수가 나오던 시절이었다. 과목도 지금 수능 과목에 비해 2배 정도 되어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았고 그 많은 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과외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 반복하고 파고들어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이런 교육의 장점도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 온 세대들이 받은 교육이 이런 것이었다. 이런 교육의 장점은 각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21) 『대구매일신문』, 2009년 7월 22일, 김선웅 대구가톨릭대 교수 기고문.

정확하고 개략적인 정리를 통해 개론적인 수준의 지식을 명료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 결과 오히려 ‘흐리멍덩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낀 경험이다.).

‘족집게 과외’가 가능했던 이런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학 능력시험이 도입되었다. 수능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학원들은 이제 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주입식, 암기식 학습보다는 ‘자료 제시에 따른 해석’ 즉, ‘수학 정도’보다는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발표에 학원들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모의 수능이 실시되자 학원가에는 그야말로 ‘대박사태’가 벌어졌다. 언어영역에서 대부분의 지문들이 교과서 자체에서 나오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제 주어진 교과서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텍스트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했고 그것은 학생의 판단과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해 줄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은 학원에 다녀야 했다. 시험 과목 자체가 얼마나 생소한가! 언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 외국어영역 등. 부모들은 탐구영역이 도대체 무슨 과목으로 채워져 있는지, 외국어영역이 영어인지 제2외국어인지조차 헷갈리고 언어에는 국어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이 단순하게 정해져 있었던 학력고사와 달리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에서는 <정석>의 연습 문제 정도의 문제가 나오던 것이 길고 복합적인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문제가 어느 단원에 속하는 문제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해 했다.

탐구영역에서는 더욱 가관이었다. 일반사회, 윤리, 지리, 국사의 문제를

과목별로 단독으로 출제하더라도 어려운데 통합교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과목별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그 누가 통합교과에 대한 수업을 해 줄 수 있었겠는가? 재수생 종합반에서 강의하던 사회 선생들은 그 당시 새벽까지 수업을 해야 했다. 지역 학원들에서 학생들만 모아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학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일이 발생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네 과목을 다 공부해야 했고 통합과학, 통합사회 수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평가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학습을 성실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듣더라도 문제는 그것과 별로 관계없이 나오니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점수가 나오자 학생들은 더욱 절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긴 문장을 빠르게 읽고 그것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탁월한 ‘감’을 가진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영어에서도 전체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맥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더 이상 단어와 숙어, 문법에 대한 공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문제 풀이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 답을 추론하는 방법, 중간에 등장하는 접속사에 따라 문장을 선택적으로 읽고 답을 추측하는 방법 등의 문제풀이 기법 강의들이 인기를 끌었다. 단기간에 걸쳐서 얻기 어려운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기법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교육하고 학습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회로 학습을 더욱 장려하는 것이 평가의 의미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문학 작품과 사회를 이해하는데에 필수적인 문장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확정해주고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정도의 시험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된다.

현행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학 교과서만 하더라도 18종류에 달한다. 그 책들만 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낯선 작품들이 자주 등장해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 09년 수능에서는 41점이 배정되었는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지문들이 실제 배우는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별로 뽀족한 대책 없이 보는 듣기(9점), 쓰기(15점)까지 고려하면 사실 학생들은 어떤 주어진 텍스트를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지문들이 나올지 자체를 몰라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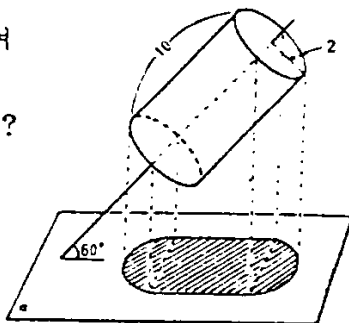
물론 독해력,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은 단기간에 걸쳐서 함양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단순히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를 열심히 읽고 분석하는 이상의 노력, 즉 개인이 학교 수업이나 독학을 통해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시험의 방식이 적실성이 있는 시험의 방식인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력고사 시절만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었고 본인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친구가 어디까지 몇 번을 공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했고 스스로의 공부의 정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힘들게 되었다. 학교 밖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시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학생 혼자만의 노력으

로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면은 특히 수리 영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아래의 문제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능에서는 이전의 학력고사와 달리 단순하게 한 두 개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고 여러 부문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해서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2009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 1등급은 원점수 79점, 수리가형의 1등급은 원점수 82점으로 추정된다.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가 80점 정도라면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쉬운 수능으로 수리가형의 1등급이 원점수 98점이었던 08년과 같은 수능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의 학력고사에 비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목을 줄인 것이 오히려 깊이 있는 문제를 내는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이다.

14 반지름이 2, 높이가 10인 직원기둥이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alpha$ 와  $60^\circ$ 의 각을 이루고 비스듬히 놓여 있다. 이 직원기둥의 평면  $\alpha$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는?

- ①  $10 + \pi$
- ②  $10 + \sqrt{3} \pi$
- ③  $20 + 2\pi$
- ④  $20 + 2\sqrt{3} \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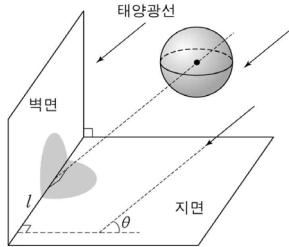


학력고사 정사영 문제

15.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구 모양의 공이 공중에 있다. 벽면과 지면은 서로 수직이고, 태양광선이 지면과 크기가  $\theta$ 인 각을 이루면서 공을 비추고 있다. 태양광선과 평행하고 공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벽면과 지면의 교선  $l$ 과 수직으로 만난다.

벽면에 생기는 공의 그림자 위의 점에서 교선  $l$ 까지 거리의 최댓값을  $a$ 라 하고, 지면에 생기는 공의 그림자 위의 점에서 교선  $l$ 까지 거리의 최댓값을  $b$ 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보 기>

ㄱ. 그림자와 교선  $l$ 의 공통부분의 길이는  $2r$ 이다.  
 ㄴ.  $\theta = 60^\circ$ 이면  $a < b$ 이다.  
 ㄷ.  $\frac{1}{a^2} + \frac{1}{b^2} = \frac{1}{r^2}$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능 정사영 문제

실제로 97년 수능은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400점 만점에 216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다. 너무 어려운 수능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으로 2001년에는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336점으로 쉬운 수능이 출제되었지만 곧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2년에는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수능과 쉬운 수능이 정권의 정책에 따라 번갈아 바뀌고 점수제와 등급제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당

하고 학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득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4.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가장 근원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교육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하는 음악 미술 등 예능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면 누구나 하는 선행학습, 수능에 대한 준비, 논술에 대한 준비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학교에서 그 어떤 공급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중 어떤 것들은 기존의 학교 시설과 교사진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이른 시간이면 수업이 끝나고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교육은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학교마다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에 교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12시에 수업이 마치는데, 오후 방과 후 학교에 1학년 담임선생도 참가한다. 근무 시간에 추가적인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하는 셈이고 물론 그 수업료는 공적비용과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합해진 것이다. 이렇게 오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업을 할 수 시간이 있는데 공교육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한다면 수업 부담 증가로 인한 교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정된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사들의 노동 강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현재 교사들이 그들이 받고 있는 직업상의 안정과 보수에 타당한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찬씨가 장관을 하고 있을 때부터였다. 이해찬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학교에 ‘존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걸게 하고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등 교사들과 마찰을 빚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무시험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학교에서 오히려 공부에 대해 손을 놓도록 만들었다. 체벌을 하는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까지 출동하는 일이 이때 벌어지기도 했다. ‘이해찬 세대’(98년 99년 재학생)부터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태도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과 마주 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 일이다.

이제 학교는 존지를 받는 장소이고, 늙은 선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곳이고, 공부는 하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 굳이 학교에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된다. 질문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받는다. “너는 학원도 다니지 않니?”라고. 학교에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2002년부터는 ‘무시험 전형’이 도입된다는 기대로 잠시 사교육비가 감소했지만 이내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판명되자 또다시 사교육은 극성을 이루게 되고 학교와 학원은 그 위치가 뒤바뀌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극심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형’, ‘무시험 전형’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가위 바위 보’로 학생을 뽑을 수도 없으니 시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 어딘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할 곳은 학원밖에 없으니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고… 문제의 근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쟁이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 주고 그 경쟁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



지 못한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을 비판할 수도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사를 지금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교사들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책적이 방향이 ‘공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는 식의 말들이 떠돌 때 이런 방향의 정립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지식’이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옳은 판단을 통해 ‘좋은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단순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야만 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학생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장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교육비가 급증하자 대책으로 내어 놓은 ‘방과 후 학교’, ‘사교육 하지 않는 학교’는 이런 방향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학원에 빼앗긴 학생들을 다시 찾아오고 학교라는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자는 방안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수준별 교육을 하고 공부의 양을 늘리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학교로 들어오고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성과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

기이다.

그러나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단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교과부는 2009년 전국의 457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매년 1억 3천만원 씩 총 600억원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점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라는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비용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사적인 교육의 비용이 공적으로 부담한다는 면에서 어떤 ‘정부실패’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이미 2009년 2월 3일 서울시내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학교장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라 사실상 ‘사교육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방식인데 돈을 받고 하는 학교 내의 사교육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수업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또 다른 사교육을 찾게 되면 오히려 공적 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목동’ 등에서 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은 100여개가 넘는다. 경제학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학원은 나름대로의 ‘상품차별화’를 통해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학원들과 ‘학교 내 사교육’이 경쟁할 때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극심한 경쟁체제인 학원의 시스템이 학교 안으로 도입될 때 분명 교육의 ‘효율성’은 강화되겠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 사이의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 인기영합적인 수업 방식의 등장, 교사와 외부 강사 사이의 갈등, 수강생 확대를 위한 시도의 부작용 등 일반적으로 ‘단과 학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학교 내에서 등장한다면 오히려 공교육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영어 수

학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하고 기존의 보충 수업을 통해 뒤떨어진 학생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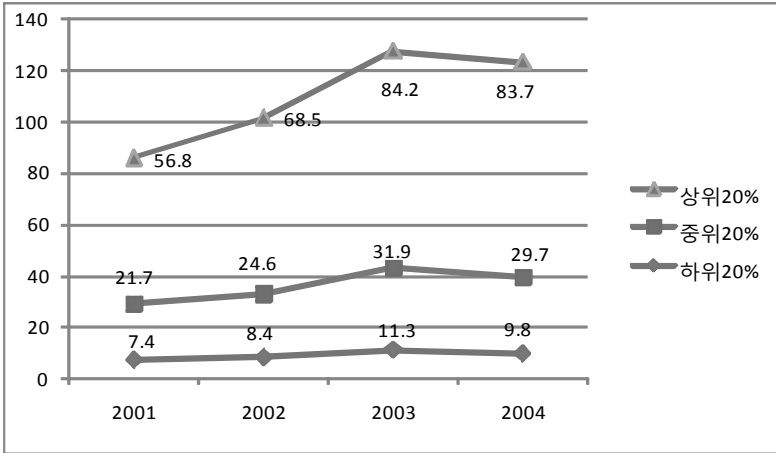
지난 9월 2일 교과부에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우수교원에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 장기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퇴출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다. 교사들은 매년, 아니 매순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퇴출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학원 강사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연방정부가 3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되 성적이 부진하면 학교 문을 닫고 교직원을 해고하기로 한’ 미국 오바마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졸업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폐교와 교직원 전원 해고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미국의 교육 현황과 한국의 교육 현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sup>22)</sup> 비록 오바마가 연일 한국의 교육에 대한 칭송의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우리의 공교육 상황은 미국에 비해 더 나은 상황인지 의문이 든다. 이미 수능 성적을 받은 절박한 고3 학생에게 갈만한 대학을 다 결정해서 오라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로 근무하는 교사가 있다면 퇴출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22) KBS 뉴스 보도, 2010년 3월 2일(<http://news.kbs.co.kr/world/2010/03/02/2055955.htm>).

## IV.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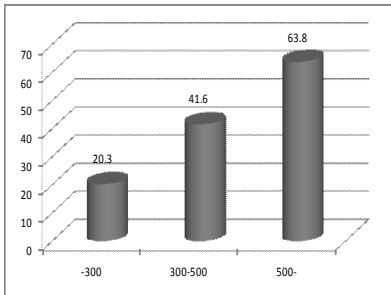
국민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당분간 치열한 경쟁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 시대에 자녀의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계급사회가 세습된다면 것처럼 부정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육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6개 자사고의 학부모 월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2005년 1사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329만원)의 1.6배에 달한다. 해운대고는 587만원, 상산고는 586만원, 최고의 자사고로 간주되는 민사고 평균 687만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나마 우리 사회의 활력적인 요소로 존재했던 사회 계층간, 계급간 활발한 이동이 둔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더 벌어진 것은 좌파성향 정부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사교육비 증가하게 하고 사교육비에 따라 수능 점수가 차이 나게 해서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게 한 것이 정권의 의도된 목적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서술한 정책담당자들의 구체적 현장에서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얼마나 우리 정치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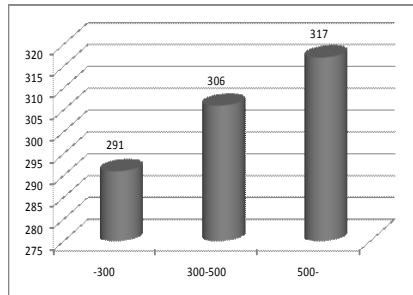


상위20%와 하위20%의 사교육비 격차(단위 만원)

\* 자료: 2006년 양정호의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월평균소득과 사교육비



월평균 소득과 수능 평균 점수

\*자료: 2005년 김경근의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2005 한국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왜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교육 정책에 있어서 그야말로 ‘헛발질’이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정치철학자 달마

이어(Fred R. Dallmayr)는 영국의 보통법이 “추상적인 공식이 아니라 영국에 법정에서 해석된 영국의 보통법이라는 것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의 교육 제도는 “추상적인 공식이 아니라 한국의 학교, 한국적 상황, 한국의 교육 현장과 당사자들에게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한국의 교육 제도”라는 말이라는 점이다.<sup>23)</sup> 그러나 우리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그들은 교육의 ‘현장’이나 ‘당사자’들은 안중에 없고 ‘추상적인 공식’으로 교육 정책을 다루는 듯하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압제적’이다. 그들은 “행동의 윤리적 표준이나 공유된 규칙”(ethical standards and shared rules of conduct)에 입각하지 않고 “의지 혹은 의지력 나아가 군주적 의지에 대한 탐닉”의 상태에서, “단지 하나의 입법이나 군주적 명령”의 형태로 교육 제도를 만들고 반포하려고 한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당사자들—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공유된 유대 혹은 유대맺음의 형태”가 없이 “추상적인 공식”으로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들이 교육 정책을 임하는 자세는 마치 “두뇌위원회나 전문가정치”와 같은 태도이다. 그들은 교육 제도를 비롯한 모든 법령이나 명령이 “한 입법자의 인간적인 명령이나 의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왕의 의지 표명 외의 다른 의지 없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한 지배자의 독점적 칙령”같은 제도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삶을 지혜나 윤리적인 교양 없이 의지력이나 권력 조직을 통해 통제하려는” 태도의 표명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은 “괴물”(Chimera)러 변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교육 제도 변경사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영국의 보통법이 “확립된 절차 하에서 특정한 논쟁들에 대한 결정을 통

23) 이하의 인용은 Fred Dallmayr, *In Search of the Good Life*, 3-20.

해 오래된 관습이 점차 사법적으로 발전한 산물”이었다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의적이지 않은 확립된 절차들을 존중하면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들을 통해 오래된 관습이 점차 교육적 관행으로 발전한 산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합리적 분석에 앞서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 즉 “경험된 세계”(또는 생활세계)의 맥락으로 되돌아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을 바탕으로 교육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태도 없이 현장을 무시한 교육 제도를 마구 만들어 내어 던진다면 “사회에서 강제적 조직들이 증가할수록 무질서도 동일하게 증가”하고, “더욱 더 권위는 많아졌는데 그렇게 안정을 점점 더 줄어드는”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격심한 침체가 나타나고 삶의 기준의 개선은 지체되기만 하는” 현상은 “인간의 유한성과 개방된 것이어서 결코 완전하게 관리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의 현장을 벗어나게 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장을 바탕으로 절실한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때 마치 영국이 자랑하는 ‘보통법’처럼 우리도 교육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성장해 온… 보고(寶庫)”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목동의 우리 학원에는 성공한 선배들의 사진과 체험담이 걸려 있다. 봉천동에서 힘들게 살며 남매가 서울대 공대와 경영대에 합격한 성민과 주희, 4자매의 만언니로 자기방도 없이 공부해 경희대 치대에 합격한 수진, 1년 만에 거의 100점이 올라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의대에 합격한 덕현, 아빠가 트럭운전을 하며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오로지 인내 하나로 한의대에 합격한 재현, 홀어머니 밑에서 곳곳이 남자답게 노력해 고려대에 합격한 동은… 이들의 사진 위에는 “인생은 노력하는 만큼 보답합니다. 선배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나와 남에게 좋은 삶이 되도록 합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공담을 듣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교육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성된 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만큼 한 계단 두 계단 상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2005 전국교육연구소 네트워크 발표.
- 양정호. 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Fred Dallmayr. 2007. *In Search of the Good Life: A Pedagogy for Troubled Time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Abstract】**

**An On-the-Spot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O, Chi-Kyu(O, Chi-Kyu's Institute of Education in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serious problems common to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in Korea, especially, since 1998. Most of all, their policy aims had effects opposite to their presumed expectations. It was largely owing to policy directors' disregard to the concrete circumstances which surrounded education, that is, their lack of experience. For example, the measures to reduce expenditure on the private sector of education sapped the public education, making students more dependent upon the private-supplied education. The present educational policies have suffered a similar failure. The chief causes are (1) trying to screen the stubborn fact of competition, making a deceptive surface of non-competition, (2) the too-frequent reformations of educational courses and tests, (3) the difficult forms of test in the SAT, (4) the disability of public schools to meet urgent matters of educ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se concrete circumstances, every policy would end up in the same failure. I argue that the proper remedy for these inconveniences consists in recovery of 'lived experience' in the making of policies.

Key Words: education policy, entrance exam for university,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 the spot of education

접 수 일: 2010년 9월 16일

심 사 일: 2010년 9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0월 5일